“종중재산 남녀 차등 분배 평등권 침해 아니다”

법원 판결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에게 여성 종중원보다 재산을 많이 나눠준 것을 남녀차별 또는 평등권 침해로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5년 7월 여성에게도 종중원의 자격을 준 대법원의 ‘딸들의 승리’ 판결 뒤 처음으로 나온 종중재산의 구체적인 남녀 분배에 관한 판결이라서 비상한 관심을 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민사12부(김재협 부장판사)는 우봉 김씨 계동공파 16·17·18대손인 김모(65)씨 등 여성 종중원 27명이 “독립 세대주인 남성 종중원과 똑같은 액수의 재산을 나눠달라”라며 종중을 상대로 낸 분배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종중이란 공동 선조의 분묘 수호와 제사 및 종원 상호 간의 친목 등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자연발생적인 종족 집단”이라며 “성과 본이 같은 후손을 중심으로 구성된 세대와 여자 후손으로 다른 종중원과 결혼해 다른 종중의 후손을 낳아 구성된 세대를 차등화한 것은 부계 혈족을 중심으로 구성된 종중의 특성상 합리적인 범위 내라면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우봉 김씨 계동공파 종중은 지난해 6월 은평구에 있는 종중의 땅이 공익사업 토지로 수용되면서 137억여원을 받자 총회의결을 통해 독립 세대주에게 50억원, 20세 이상 비세대원과 20세 이상 딸들에게 40억원을 나눠준다는 원칙을 세워 남성 세대주에게 3천800만원, 비세대주와 여성 출가자에게 1천500만원씩을 줬다.

여성 종중원 27명은 차등 지급에 반발해 “합리적 이유 없이 출가한 여자를 차별해 평등권을 침해했다”며 토지수용 보상금 가운데 종원에게 배분하기로 한 90억원의 ‘1/n’인 3천100만원씩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여성 종중원들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화인의 이영범 변호사는 “여성의 종중원 지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에 위배되는 것으로 평등권을 침해하는 말도 안 되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부정대출 신협 前 이사장 영장

전남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5일 부동산 감정평가서를 조작해 부정 대출을 해 준 광주 S신용협동조합 전 이사장 문모(49)씨에 대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이를 도운 전 직원 안모(38)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문씨는 자신이 이사장으로 재직하던 지난 2004년 9월께 자동차 매매상 이모(40)씨의 부동산 담보 능력이 부족하자 대출 담당자인 안씨 등에게 자체 감정서를 조작하도록 지시, 3억원을 대출해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문씨 등이 부정대출을 돕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받았는지 여부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서민정기자 viola@kwangju.co.kr

‘전어 사주기 운동’ 소리만 요란

광주·전남 기관·단체·기업들 ‘외면’
600여 t 凍死 우려…양식어민 ‘시름’
전남도·신안군·현대삼호重·목포해수청 참여

‘양식 전어 사주기’ 운동이 헛구호로 그쳤다. 전남도와 신안군, 현대삼호중공업과 목포지방해양수산청을 제외한 광주·전남 대부분의 기관·단체·기업이 ‘강 건너 불구경’한 것이다.

전남도와 신안군이 ‘양식 전어 사주기’ 운동에 나선 것은 지난 10월 말. 새만금 등에서 자연산이 대량으로 잡히면서 신안군 압해·증도·지도 등 도내 7개 시·군의 양식 전어 출하가 중단돼 어민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각 기관·단체·기업 등에 협조공문을 보냈다. 판매 가격은 4㎏당 2만원(㎏당 18~20마리)이었다.

신안군 공무원들은 맨 먼저 1천24㎏(512만원)을 구입했으며, 이어 ▲현대삼호중공업 (1천100㎏, 550만원) ▲목포지방해양수산청 (440㎏, 220만원)이 동참했다. 전남도청은 대형 유통업체에 판매를 주선, 4천400여만원 상당을 팔아줬다.

하지만 기대했던 수협 등의 참여는 당초 기대보다 못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농협·교육청·경찰 등의 협조는 사실상 전무했고, 광주시 등 여타 기관들도 모른 척 했다. 광주·전남의 대기업들도 외면했고, 시민단체의 호응도 없었다.

반면 서울과 부산의 유통업체 등에서는 1만3천㎏(2천600만원)을 가져갔다. 압해면 대천리 백백훈씨 소유 양식장(4.5㏊, 물량 40t)의 경우 ‘성우교역’을 통해 일본에 3천400㎏(425만원)을 수출했다.

지난달 말 현재 팔린 물량은 108.7t으로, 총 판매액은 1억4천665만원에 불과했다. 이중 기관·단체·기업이 소화한 비율은 40%도 채 안 된다.

‘양식 전어 사주기’ 운동 부진으로 신안지역은 올해 68.8㏊에서 양식한 516t 중 61.8%인 318.8t이 그대로 남아있다. 전남지역 7개 시·군 양식장 전체로는 총 생산량 1천242t 중 600여t이 판매처를 찾지 못했다.

문제는 잔여 물량에 대한 판매 대책이 전무하다는 점. 전어는 수온이 10도 이하로 떨어지면 며칠 못 가 동사(凍死)하기 때문에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미판매 물량은 최소 10억~20억원대에 이르고, 종묘대·인건비·사료대·전기료 등을 포함할 경우 그 피해는 훨씬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신안군 문성칠 수산기술팀장은 이와 관련 “대량으로 물량을 소화할 수 있는 기관·단체·기업들의 참여가 너무 저조했다”며 “기온이 급격히 떨어질 경우 피해가 크게 늘어나게 되고, 정부 수매 계획도 없어 걱정이 많다”고 말했다.

한편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계속되면서 5일 경기 강화도·영흥도 양식장 5곳에서 290t의 전어가 집단 폐사했다.

/홍행기기자 redplane@kwangju.co.kr
/신안=조완남기자 wncho@kwangju.co.kr

추위가 닥치기 전 출하 준비에 바쁜 신안군의 한 전어 양식장. 전남도와 신안군 등은 전어값이 폭락하자 ‘양식 전어 사주기’ 운동을 펼쳤으나, 실제 참여한 기관·단체·기업이 적어 어민들에게 큰 보탬이 되지 못했다. /신안=조완남기자 wncho@

전남도청사 통신망 ‘로비’ 수사
F1사업 유치 업체도 내사 착수
광주지검 특수부

전남도청 신청사 정보통신망 구축사업과 관련한 로비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했다.

광주지검 특수부(김종호 부장검사)는 5일 전남도청 정보통신망 구축과정에서 도청 간부들을 상대로 로비를 벌인 것으로 알려진 D산업에 대해 최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관련 서류 등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압수 서류에 대한 검토작업과 업체 관련자 조사 후 도청 간부 및 직원들의 금품 수수 혐의가 드러날 경우, 공무원들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검찰은 또 전남도가 추진중인 J프로젝트 주요 사업 중 하나인 F1사업의 유치 업체에 대해서도 정보를 입수하는 등 내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부장은 “도청 정보통신망 구축과 관련 D업체에서 도청 간부에게 수천만원의 뇌물을 전달했다가 돌려받았다는 정보를 입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면서 “D산업에서 압수해 온 압수물을 정밀 검토하고 있으며, 도청 정보통신망 구축 사업이 이뤄진 시점을 전후한 업체의 자금 흐름도 함께 추적 중”이라고 말했다.

또 “전남도의 F1 사업 유치업체의 경우 단순히 페이퍼 컴퍼니(Paper Company·서류로만 존재하는 회사) 아닌가 하는 의혹을 갖고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사병, 모텔서 숨진채 발견

지난 4일 오후 6시께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W모텔에서 육군 모 부대소속 김모(22) 이병이 피를 흘리고 숨져 있는 것을 종업원이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발견 당시 김 이병은 배에 깊은 상처를 입은 채 욕실 바닥에 쓰러져 있었으며, 근처에서 흉기 1개가 발견됐다. 모텔 방에 있는 컴퓨터 모니터에는 “여자친구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의 짧은 글이 남겨져 있었다.

제주 출신으로 지난 10월 중순 군에 입대한 김 이병은 지난 2일 면회 온 부모와 외박을 나와 하룻밤을 보낸 뒤, 소속 부대에 “곧 복귀하겠다”고 연락을 한 뒤 소식이 끊겼었다.

/이승배기자 lsb54@kwangju.co.kr

광주 지하철 여 화장실 훔쳐보다 ‘덜미’

쌍나팔

○…지하철 역사(驛舍) 여자 공중화장실에서 여성이 용변 보는 모습을 훔쳐보던 술 취한 40대가 광주 도시철도 개통(2004년 4월28일) 이후 처음으로 덜미.

○…광주 동부경찰에 따르면 박모(47·광주시 서구 화정동)씨는 지난 4일 밤 9시50분께 동구 금남로 4가 역 여자화장실에서 성모(여·21)씨가 용변을 보는 모습을 몰래 보다 역무원들에 붙잡혀 CCTV로 사실 확인 후 경찰에 넘겨졌다는 것.

○…경찰은 “박씨가 사진촬영을 한 것은 아니어서 성추행 혐의는 적용하지 못했다”면서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동안은 주거의 개념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했다”고 설명.

/임주형기자 jhlim@kwangju.co.kr